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2022.1.25

목 차

결과보고서 요약문	1
I. 사업 내용	5
1. 당초 계획	5
1) 사업 개요	5
2)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5
가. 사업 추진 배경	5
나. 사업 목적	9
3) 사업 기본방향	9
가. 제도적 생활안전망 실태 조사	9
나. 정책 대안 도출	9
4) 사업 기대효과	10
가. 기대효과	10
나. 예상 성과 결과물	11
5) 사업 참여 인력	11
2. 실제 추진 현황 및 내용	13
1) 사업 추진 일정	13
2) 사업 내용	14
가. 사업 1: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실태 조사	14
나. 사업 2: 탈북민 대상 생활안전망 구축 정책 대안 도출	17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21
1) 사업 1: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실태 조사	21
가. 세부사업 1: 제도적 생활안전망 조사	21
나. 세부사업 2: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이용 현황	27
다. 세부사업 3: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현황 조사	34
2) 사업 2: 탈북민 대상 생활안전망 구축 정책 대안 도출	50

가. 세부사업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50
나. 세부사업 2: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 구성	54
다. 세부사업 3: 정책 개선 방안 도출	63
II. 예산	66
1. 연구계획서상 예산	66
1) 연구계획서상 예산	66
2) 연구계획서상 상세 예산	67
2. 실제 예산 집행	68
III.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69
1. 자체 평가	69
1) 사업 평가	69
2)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70
3) 향후 계획	70
2. 건의사항	71
IV. 관련자료	72
1.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첨부1)	72
1. 지역적응센터 설문조사지 (첨부2)	72
참고문헌	73

|| 표 목 차 ||

표 1. 사업 추진 현황	13
표 2. 탈북여성 대상 FGI 참여자 정보	15
표 3.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설문조사 내용	16
표 4.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17
표 5. 탈북민 지원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18
표 6.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주요내용	2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계획 및 추진 일정	10
그림 2.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포스터	19
그림 3.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 22 행사 화면	20
그림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21
그림 5.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과제 현황 ·	23
그림 6.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25
그림 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사업추진체계	26
그림 8. 전국 지역적응센터 위치	34
그림 9. 지역적응센터 근무 인원 및 비율	35
그림 10. 지역적응센터 예산 구성	35
그림 11. 지역적응센터 예산 규모	36
그림 12.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제외 사업비	36
그림 13. 지역적응센터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탈북민 회원 비율	36
그림 14. 코로나19 이후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변화	37
그림 15. 코로나19 전후 보호기간 종료 탈북민의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참여 비율	37
그림 16. 지역적응센터 실무자가 응답한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38
그림 17. 지역적응센터 실무자가 응답한 탈북민 정착 지원 서비스 요구도	39

결과보고서 요약문

사업기관	생활과학대학		
사업명	탈북여성·아동·가족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사업		
사업 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진미정	서울대학교	교수
사업기간	2021.3.1.~2021.2.28	사업비	
<p>1. 사업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탈북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실무자, 탈북민단체 등 관련자를 통해 탈북민의 생활안전망 관련 정책·제도의 활용 실태를 조사함. ○ 탈북민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p>2. 사업 내용</p> <p>1) 사업 1: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실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1: 제도적 생활안전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민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 정책 현황 검토 ○ 세부사업 2: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이용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북민 FGI ○ 세부사업 3: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응센터 이메일 설문조사 -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면접조사 <p>2) 사업 2: 탈북민의 생활안전망 정책 대안 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 탈북민 정착 지원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 세부사업 2: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 구성
- 세부사업 3: 정책 개선방안 도출

3. 사업 성과

1) 기존 전달체계 개선 방안

- 지역적응센터의 안정적 운영 보장
 - 지역적응센터는 탈북민에게 대민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전달체계이므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함.
 - 국고보조금은 통일부에서 확보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 독립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를 개정하여 광역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탈북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
 - 보수체계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전문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시간외 근무수당, 교통비 등 처우 개선에 필요한 수당제 도입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자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지역적응센터 운영의 유연성 확보
 - 단기적으로는 25개 센터 개소 수를 유지하되, 입국 탈북민 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규 입국자를 탈북민이 많은 지역에 배정하여 접근성 높은 지역의 지역적응센터를 이용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10년 이내 전입자가 없는 지역은 지역적응센터의 성격을 전환하여 초기집중교육 등을 폐지하고 사례관리 사업만 남김.
- 기존 및 신규 전입 탈북민이 많은 지역은 지역적응센터의 예산과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여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생활안전망 구축 방안

○ 지역적응센터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필요

- 입국 후 기간을 고려하여 정착 초기(5년 이내), 중기(6~10년), 장기(11년 이상)를 구분하여 지역적응센터는 초기, 중기 탈북민 대상 서비스에 집중하고, 장기 탈북민은 지역적응센터 외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른 전달체계를 이용하도록 연계하는 것을 제안함.
- 탈북민이 많은 지역의 가족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탈북민 이해교육의 실시를 제안함.

○ 탈북민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구축 필요

- 비공식 사회관계망은 생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요소이나 탈북민들의 사회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안전, 조기정착 등의 목적으로 탈북민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는 탈북민들이 있음. 따라서 건강한 탈북민단체를 양성하여 사회관계망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초한 다양한 비공식 조직(마을공동체, 자조모임, 자원봉사 단체 등)에 탈북민이 참여하면서 사회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취약 탈북민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탈북민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커짐. 정착 기간에 관계없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 증가함.

- 특히 아동, 노인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탈북민 지원 방향

- 공식적, 비공식적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되, 가구·가족 단위로 일상생활 문제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단계(1인 가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함.

I

사업 내용

1. 당초 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명: 탈북여성·아동·가족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사업
- 기관명: 생활과학대학

2)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사업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 [배경 1] 탈북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안전망 미확보 문제가 2019년 하반기부터 제기됨.
 - 2019년 7월, 탈북 모자가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탈북민의 남한 생활 지원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제안 사업의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위의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의 '탈북 엄마의 마지막 눈물'(2019년 11월 16일 방영)편의 취재 및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특히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탈북 여성과 아동의 생활안전망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게 됨.

□ [배경 2]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한 생활 정착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 폐지와 함께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북한이탈주민법 제1조)으로 함.

○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탈북민을 지원함에 있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 및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201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의 2, 2항)함을 명시한 조항이 추가되었음.

○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보호 및 정착 지원 제도는 체계적으로 정비, 개선되어 왔음.

– 북한이탈주민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착 지원시설, 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제공,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정착금 지원, 거주지 보호, 생활 보호,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함.

○ 탈북민의 지역 정착을 돕는 기구로 ‘남북하나재단’과 ‘지역적응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탈북민들을 위한 종합 포털사이트로 ‘하나포털’이 있음.

-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따라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초기정착부터 생활 보호, 취업, 창업 및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탈북민의 자립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남북하나재단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를 통해 탈북민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한다.
-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 2(지역적응센터의 지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적응센터, 즉 '지역적응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음. 서울 지역 4개소, 경기지역 7개소, 강원지역 2개소, 중부지역 3개소, 영남지역 5개소, 호남지역 3개소, 제주도 1개소를 포함한 총 25개소의 지역적응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2021년 1월 기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전문상담사는 약 100여 명으로 탈북민의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분야에 대한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배경 3]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있고 탈북민의 실질적 생활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탈북민과 같은 취약계층 가족의 생활안전성, 나아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넘어 포괄적 차원의 '생활안전망' 확보가 필요함.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란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광의의 사회보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적 지원 장치를 의미함.
- 생활안전망(daily living safety net)이란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의미하며, 공식적, 제도적 성격의 사회안전망과 더불어 비공식적, 비제도적 특성의 다양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확보될 수 있음. 즉, 사회안전망은 생활안전망의 필요조건이지

만 충분조건은 아님.

- 탈북민의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와 틈새를 없애주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의 비공식적 안전망의 확보가 중요함.

(2) 필요성

□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 남한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탈북민의 생활안전망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이루어진 바 없음.

- 탈북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는 취업지원제도(김혜원, 2020; 이진석, 2020; 조민희, 유호열, 2019 등), 정착 지원제도(권숙도, 2018; 나근호, 2019; 백남설, 2019 등), 신변보호제도(김학범, 김현수, 2019; 송은희, 설진배, 박병석, 2018 등) 등 일차적인 보호와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적 연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함.
-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같은 극단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안전망의 작동방식을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하고, 제도적 서비스의 충분성과 효율성에 대해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이러한 정책과 서비스를 진단함에 있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문헌연구와 정책 진단을 통해 탈북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검토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생활안전망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사업 목적

-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탈북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실무자, 탈북민 단체 등 관련자를 통해 탈북민의 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제도의 활용 실태를 조사함.
- 탈북민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3) 사업 기본방향

가. 제도적 생활안전망 실태 조사

-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에 대한 문헌 조사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개소) 운영 현황에 대한 센터 실무 책임자 설문 조사
-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 조직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한 전문가 면접조사

나. 정책 대안 도출

- 정량적, 정성적 자료 분석
-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 탈북민 대상 정책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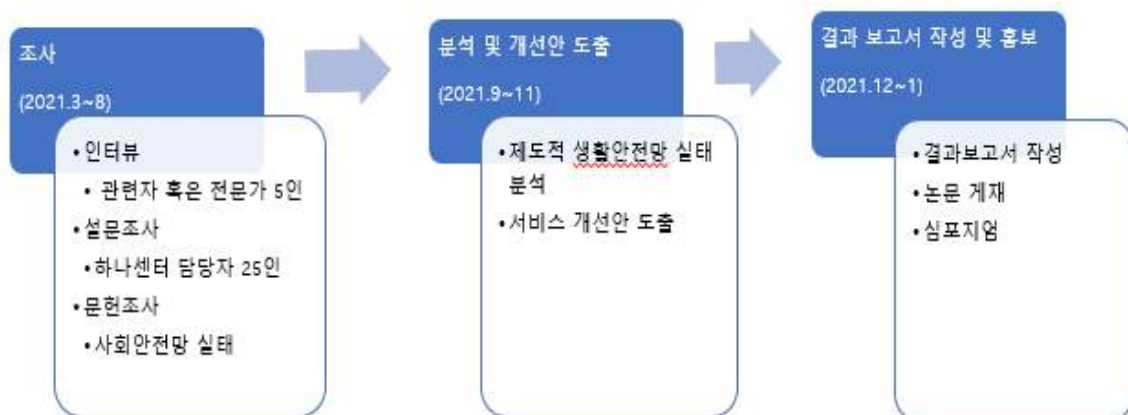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계획 및 추진 일정

4) 사업 기대효과

가. 기대효과

- 탈북 여성과 아동을 위한 생활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탈북 여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정책의 범위와 작동 방식을 점검하고, 정책과 서비스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함.
 -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성 높은 생활안전망 정책을 제시하여 서비스의 수요 공급 간 비효율적 미스매치를 줄임.

- 탈북 여성과 아동을 위한 생활안전망 구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탈북 여성과 아동을 위한 생활안전망 구축은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춰 온 그동안 정책 기조를 한 단계 발전시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는 접근임.
 - 탈북 여성과 아동의 생활안전망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소속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탈북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삶의 질 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 구축
 - 탈북 여성과 아동을 위한 생활안전망 기반 구축 연구는 향후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안전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생활안전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적 서비스의 인지도와 정책 리더러시를 높여 탈북 여성과 가족이 주체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음.

나. 예상 성과 결과물

- 본 사업의 일부 결과물을 사업 종료 후 학술지에 투고할 계획이며,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연합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임.
- 본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2022년도 통일기반구축사업의 탈북민 대상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계획임.

5) 사업 참여 인력

-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소(원)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생활과학대학	1454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윤지현	식품영양학과	교수	
나종연	소비자학과	교수	
이유리	의류학과	교수	
남영민	식품영양학과	박사과정	
박정민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실제 추진 현황 및 내용

1) 사업 추진 일정

- 4~10월에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4~5월, 8~9월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 문헌조사 및 전문가조사에 기반하여 9~12월에 지역적응센터 조사 및 탈북여성 조사를 실시함.
- 지역적응센터의 정기 기관평가 시기(7~8월)와 맞물려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조사를 당초 계획한 시기에 못하고 연기하여 9~10월에 진행함.
- 1~2월에 사업을 종료하고 보고서 및 논문 작성할 계획임.

표 1. 사업 추진 현황

세부 내용	기간 (월)												비고 진행상황 (2022.1.15 기준)	
	2021										2022			
	4	5	6	7	8	9	10	11	12	1	2			
사업 1&2	• 문헌연구	—————												완료
	• 전문가 조사	———				———								완료
	• 지역적응센터 조사						—————						완료	
	• 연합학술대회								———				완료	
	• 탈북여성 조사								—————				완료	
	• 보고서 및 논문 작성											———		진행중 (논문 작성중)

2) 사업 내용

가. 사업 1: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실태 조사

(1) 세부사업 1: 제도적 생활안전망 조사

- 탈북민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 정책 현황 검토
 - 제3차 탈북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 검토
 - 2021 탈북민 정착 지원 실무편람 검토
 - 2021 탈북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검토

(2) 세부사업 2: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이용 현황

-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여성 대상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인터뷰는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한 양방향 비대면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3명씩 3차로 나누어 총 9명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참여자들은 2009년 이후 입국한 20~50대의 다양한 연령대(20대 1명, 30대 4명, 40대 2명, 50대 2명)의 탈북여성으로, 참여자 정보는 표2와 같음.
 - 1차 FGI: 2021년 11월 19일 (금) 10:00~12:00
 - 2차 FGI: 2021년 12월 24일 (금) 20:00~21:00
 - 3차 FGI: 2021년 12월 25일 (토) 16:00~17:00

표 2. 탈북여성 대상 FGI 참여자 정보

회차	연번	성명	연령	입국연도	특성
1	1	박OO	28	2018년	대학생(회계학 전공)
	2	안OO	30	2017년	대학생(성악 전공)
	3	동OO	32	2016년	대학생, 자녀 있음
2	4	이OO	31	2015년	대학생(사회복지학 전공), 1인 가구
	5	연OO	41	2011년	사회복지사(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탈북 자녀와 동반 탈북, 입국 후 자녀 출산
	6	이OO	53	2009년	인천지역적응센터 상담사
3	7	유OO	36	2010년	사회복지사, 2021년 자녀 출산
	8	이OO	49	2012년	미화원, 입국 후 자녀 출산
	9	이OO	51	2012년	간호조무사, 입국 후 결혼, 현재 탈북 자녀와 함께 거주

(3) 세부사업 3: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현황 조사

○ 지역적응센터 이메일 설문조사

- 일시: 2021년 11월 3일 ~ 11월 12일
- 조사대상: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25명
- 응답자 수: 12명 (사무국장 58.3%, 팀장 41.7%)
- 조사내용: 지역적응센터 규모, 예산, 회원 규모, 서비스 제공 현황, 탈북민 서비스 요구도, 코로나19 이후 서비스 성격 변화(표3)

표 3.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설문조사 내용

조사영역	조사 내용
개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위 • 지역적응센터 경력
센터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상근직 인원 수 • 탈북민 전문상담사 수 • 연간 예산 규모 • 센터의 예산 원천 • 센터 예산 중 통일부 보조금 제외 사업비 규모 • 운영 형태 • 등록된 탈북민 회원 • 1년 1회 이상 참여 탈북민 회원 비율 • 코로나19 확산 이후 탈북민 수의 변화 • 코로나19 확산 전후 보호기간 종료 탈북민의 비율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착 지원 제도 : 탈북민의 인지도, 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도우미제도 • 심리상담 • 미래행복통장 • 교육지원금 • 직업훈련비 및 수당 •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 • 취업장려금 • 고용지원금 • 대학 특례 편·입학
서비스 요구도 : 정착 초기 보호기간 종료 탈북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 • 경제적 지원 • 취업 훈련 • 취업 연계 • 직업훈련비 및 수당 • 심리 상담 및 가족상담 • 법률적 지원 • 집중사례관리 • 자산관리 및 노후준비 • 의식주생활 관리
주관식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기간이 종료된 탈북민들에게 특히 더 필요한 서비스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소 업무를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시 어려운 점이나, 센터 운영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평소 업무를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탈북민이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거나 센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것들 입니까? 평소 업무를 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심층면접

- 대상: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4인(표4)

- 조사내용: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사업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표 4.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날짜	방법	소 속	직 급
2021. 12. 8.	비대면	서울○○지역적응센터	사무국장
2021. 12. 14.	대면	서울○○지역적응센터	사무국장
2021. 12. 15.	비대면	강원○○지역적응센터	팀장
2021. 12. 25.	비대면	인천○○지역적응센터	실무자

나. 사업 2: 탈북민 대상 생활안전망 구축 정책 대안 도출

(1) 세부사업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 탈북민 대상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해 탈북민 지원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함(표5).

○ 1차, 2차 면접조사는 대면으로 실시하였고, 3차, 4차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양방향 비대면 조사로 실시함.

○ 탈북민 대상 제도적 안전망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함.

표 5. 탈북민 지원 전문가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회 차	날 짜	방법	소 속	직 급
1	2021. 4. 14.	대면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연구원
2	2021. 5. 28.	대면	통일맘연합회	대표
3	2021. 8. 24.	비대면	남북하나재단	본부장
4	2021. 9. 17.	비대면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

(2) 세부사업 2: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 구성

- ▷ 행사명: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 22
- ▷ 일시: 2021년 11월 30일 (화) 11:00~13:00
- ▷ 장소: Zoom 양방향
- ▷ 참석자: 연구진, 발표자, 토론자 포함 약 40명

○ 발표 1

- 제목: 탈북여성의 가족관계와 심리정서적 건강
- 발표자: 김희정(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주요 내용: 탈북여성의 트라우마, 가족관계, 심리정서적 건강의 특성 등

○ 발표 2

- 제목: 탈북민 가족상담의 이해
- 발표자: 김지향(남북하나재단)
- 주요 내용: 북한의 변화와 탈북선택, 정착과정, 탈북민 상담의 특성, 가족상담사례, 정책 제안 등

○ 발표 3

- 제목: 탈북민 지역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발표자: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주요 내용: 지역서비스 현황,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조사, 전문가 조사 결과 등

○ 지정 토론

- 김정아(통일맘 연합회 회장)
- 최은정(민주평통 종로구 협의회 청년위원장)

11.30(화) DAY2			
세션 19	10:00-12:00	세션 20	11:00-13:00
자연과학대학		인문학연구원(김종일)	
사회 임영운(생명과학부)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발표 평화통일 대비 접경지역(DMZ) 생물다양성(곤충, 버섯류) 현황 파악 및 남북한 생물명 차이 비교		발표 홍종욱(인문학연구원) 고일홍(아시아연구소) 김윤진(국어국문학과) 장문석(경희대) 류인태(성균관대)	
발표 임영운(생명과학부)			
토론 이승환(응용생물화학부) 신승관(생명과학부)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7145685689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2809304297	
		환경대학원(장수은)	
		사회 장수은(환경대학원)	
		북한 철도망의 노드 중심성 분석	
		발표 김선화(환경대학원)	
		토론 박찬운(인천연구원) 허성호(인천대) 박준홍(국립환경과학원)	
		자유토론	
			생활과학대학
			사회 윤지현(식품영양학과)
			1. 탈북여성의 가족관계와 심리정서적 건강
			발표 김희정(인하대)
			2. 북한이탈주민 가족상담과 이해
			발표 김지향(남북하나재단)
			3. 탈북민 지역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발표 진미정(아동가족학과)
			토론 김정아(통일맘연합회) 최은정(민주평통 종로구 협의회)
			참여링크 https://snu-ac-kr.zoom.us/j/85113658095?pwd=d2NaalJoaVM0Y0ZlM1RkpxTzJlZz09

그림 2.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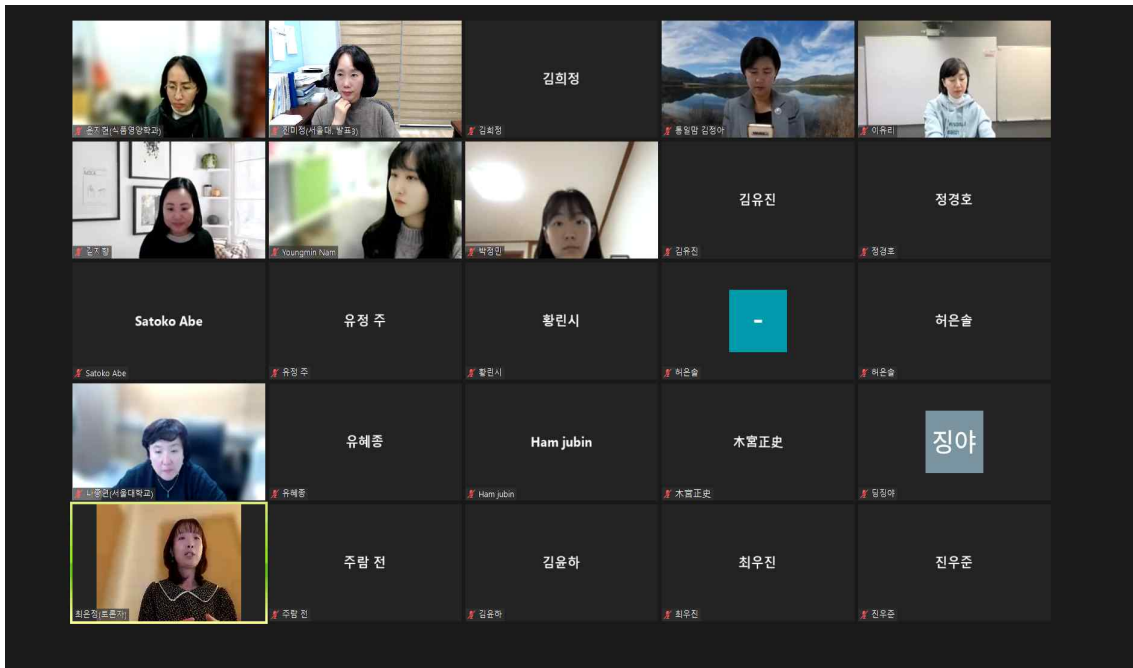


그림 3.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 22 행사 화면

(3) 세부사업 3: 정책 개선방안 도출

- 조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연구진 브레인스토링을 통해 탈북민 대상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함.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1) 사업 1: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실태 조사

가. 세부사업 1: 제도적 생활안전망 조사

(1) 탈북민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정책 현황

- 우리나라의 탈북민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 정책은 1998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관련 정책들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됨(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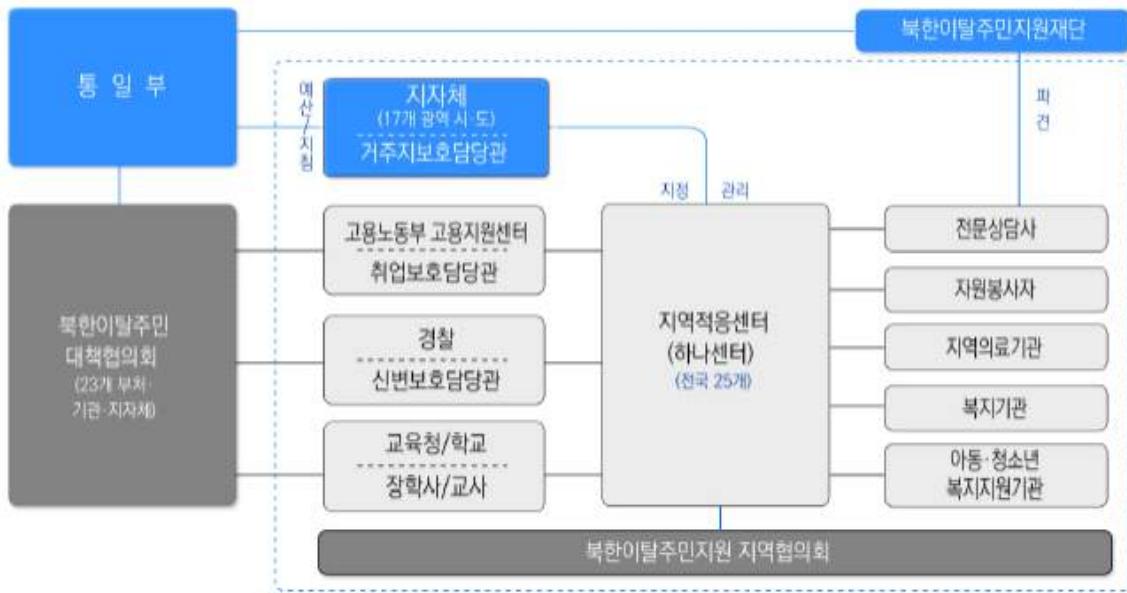


그림 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

출처: 통일부 (2021). 2021 탈북민 정착 지원실무편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함.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지원

함.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부터 3년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가장 최근인 2021년 5월에는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2021~2023)과 그 이행을 위한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6대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6대 분야별 정책과제 현황은 그림 5와 같음.

① 따뜻하고 포용적인 통합지향적 사회 환경 조성 추진

: 남북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남북주민 간 소통·교류 활성화, 경쟁력 있는 탈북민 단체 발굴·육성, 성공모델 구축·확산

② 국가와 함께 지자체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 지원 체계개선

: 다양한 복지자원, 전문성 등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탈북민 지원사업 적극 장려

③ 취약계층·위기가구 중심,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내실화

: 개인별 사례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토록 유도, 심리·의료·법률 등 탈북민 전문지원 서비스를 강화

: 관계부처 협업으로, 위기 탈북민을 신속히 발굴하고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추진

④ 탈북민의 개인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자립·자활 지원 확대

: 중앙부처·재단·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 탈북민의 취업·창업 등 지원 확대

⑤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습능력 제고, 학업중도탈락을 완화

: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등 제도를 지속 개선·보완

⑥ 정착 지원 시설 확충 및 인력 역량 개선

: 하나원이 탈북민 정착 지원의 시발점으로서 역할하도록 교육 지원 등을 확충, 지역적응센터 운영 내실화 및 인력 역량을 강화

비전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생산적 기여자로서 탈북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착	
6대 분야 24개 정책 과제	1.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1-1.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1-2. 탈북민 단체 지원 및 소통 확대 1-3.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2-1. 지자체의 참여·역할 확대 2-2. 탈북민 지원기관 간 소통·협업 강화 2-3. 비대면 정착지원 시스템 공고화 2-4. 탈북민 보호 체계 내실화 2-5.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강화
	3.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3-1. 수요 맞춤형 개인별 서비스 확대 3-2.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3-3. 심리상담 및 전문분야 교육 지원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	4-1.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4-2. 탈북민 취업지원 협업체계 강화 4-3. 자산형성 지원제도 안착 4-4.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5-1. 입국 초기 적응지원 5-2. 정규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적응 강화 5-3. 탈북대학생 교육지원 사업 개선 5-4. 대인교육시설 지원 내실화 5-5. 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지원 5-6.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5-7.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6.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6-1. 참여형·맞춤형·실용적 하나원 교육 운영 6-2. 하나센터 운영 내실화 및 인력 역량 강화

**그림 5.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의 분야별
정책과제 현황**

출처: 통일부 (2021). 2021 탈북민 정착 지원실무편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는 사회 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 보장, 교육, 상담의 7개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표 >와 같음. 7개 분야 중 사회 적응교육 분야는 탈북민의 초기 생활

지원과 집중교육을 위한 입국 직후 하나원의 기본교육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의 지역적응교육으로 구성됨.

표 6.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주요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하나원)	-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지역적응교육(지역적응센터)	- 전국 지역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정착금	기본금	- 1인세대 800만원, 2인세대 1,400만원, 3인세대 1,900만원, 4인세대 2,400만원 5인세대 2,900만원, 7인세대 이상 3,900만원
	지방거주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원(최대 9개월까지)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주거	주택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한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보증금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원: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사업 직종훈련 시 200만원 추가) - 자격취득 시 200만원 ※자격취득장려금 및 직업훈련장려금은 '14.11.29. 이후 폐지. 다만,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 결정된 자에게는 적용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고용지원금(채용기업주에 지급)	-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입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적용 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약정 금액: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 취업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 입학
	학비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출처: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실무편람

- 탈북민 국내정착의 프로세스는 국내입국과 거주지 전입을 기준으로 크게 세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 중, 국내입국 후부터 거주지 전입 전까지의 기간동안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보호결정, 하나원 정착 준비 등의 초기 생활지원과 집중교육이 이루어짐(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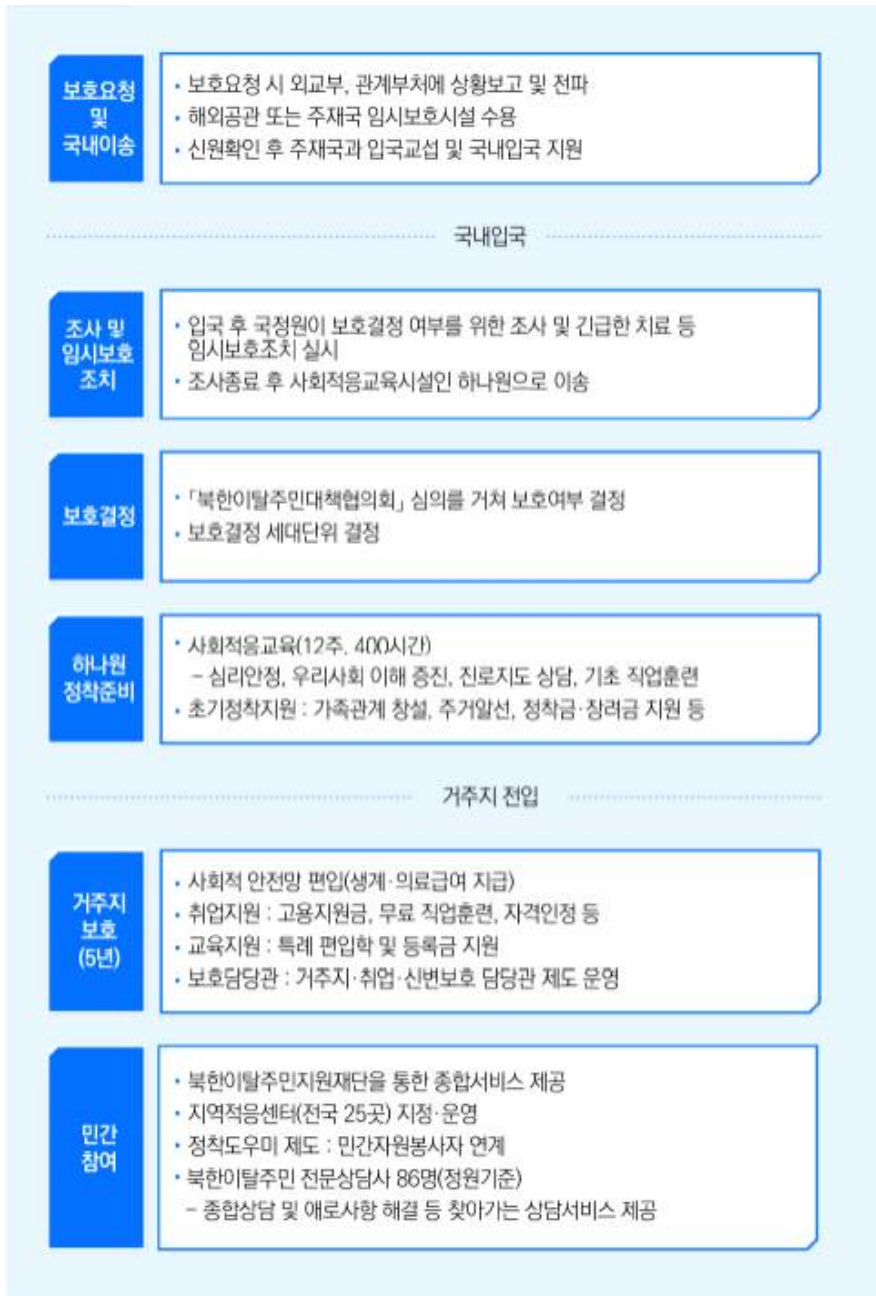


그림 6.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출처: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실무편람

- 하나센터로 불리우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진입하는 탈북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탈북민의 정착 지원 및 지역사회 적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2009년 6개 시범센터로 시작되어, 2021년 기준으로 경기(6곳), 서울(4곳)을 포함하여 전국에 2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교육 및 지원은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지역적응지원(사후지원)으로 이루어짐. 사업은 지역 전입 및 초기생활 지원,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종합 상담 및 사례관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기능의 5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적응센터가 연계하여 운영함(그림 7).



그림 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사업추진체계

출처: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나. 세부사업 2: 탈북민의 제도적 생활안전망 이용 현황

(1) 탈북여성 대상 Focus Group Interview

- 탈북여성 대상 Focus Group Interview는 주로 지역적응센터 이용 및 지원 경험에 관련된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결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적응센터 이용 및 교육 경험

- 참여자들은 입국 후 초기 정착한 지역의 지역적응센터를 이용하였으며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은 긍정적이었음. 지역적응센터의 교육 기간 및 내용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교육이 정착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교육 내용 중 특히 도움이 된 것은 정착도우미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핸드폰 개통, 컴퓨터 교육 등 일상생활 관련 교육으로 조사됨. 또한 언어 교육(북한 사투리 교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취업 관련 교육이나 연계를 통해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 준비를 지원받거나 실제 취업을 한 경우도 있었음.

안OO: 딱히 도움이 안되었던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없음. 지역적응센터에 가면 관심분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음. 또한 매해 내용도 바뀜. 한국에 나와 정착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재미없던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음.

이OO: 인천 남동구 지역적응센터를 이용했음. 그때 교육받은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다고 봐야함. 대중교통 타기, 동사무소 찾기, 창업교육 등을 받았음. 그 중에서도 이북에서 와서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저희가 고민하고 속상했던 것이 저희의 말투 때문에 많이 속상했음. 그래서 어디 가면 설 불리 말을 못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지역적응센터에서 한국말 배우기 아나운서들이 와서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음.

유OO: 저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광주에 집을 받아가지고, 그쪽을 이용했음. 정착도우미 선생님들이 집에 오셔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걸 했던 것 같음. 어차피 혼자 여기 나오다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음. 크게 불필요하다거나 도움이 안된 것은 없었음.

동OO: 취업 관련해서 연계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초구 치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해당 일자리를 선생님께서 직접 찾아봐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음. 북한에서 의대를 나왔기에, 자격이 되어서 소개해주신 치과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음.

□ 지역적응센터 교육 수료 후 지역적응센터와의 관계

- 지역적응센터 교육 수료 후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응센터와의 교류가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현재까지 활발하게 교류하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참여자 상당수는 현재 지역적응센터와 거의 교류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역적응센터에서 자녀교육 등의 지원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적응센터의 교육 및 지원은 초기에 입국한 탈북민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 후 몇 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면 대상에서 제외·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정착 후에도 지역적응센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였음.

이OO: 초기에만 이제 바깥 교육이 있는 것 같고, 인천은 더군다나 탈북민이 많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소외되는 것 같음. 후에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잘 이용을 못하고 있음.

이OO: 초창기 대전에 왔을 때는 대전에 지역적응센터 있는 것도 몰랐음. 대

전에 와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지역적응센터를 이용할 생각을 전혀 못했음. 지역적응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계기점이 하나 있었음. 저희 딸이 사춘기였을 때 대전에 왔는데 아는 지인도 한 명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대전 지역적응센터를 찾아갔음. 고등학교 때 졸업할 임박에 학교 배치받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보니 알 수가 없었음. 대전에 오다보니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볼 상황도 못됐고. 그래서 안되겠다 이럴 때 내가 지역적응센터가 절실히 필요하겠다 해서 지역적응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았음.

동OO: 지역적응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여가, 미술, 요리 등) 중에 일주일에 한 시간씩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 3년 정도 참여했음. 집에서 센터가 매우 가까워서 많이 이용함(강서구 서부 지역적응센터, 복지관 안에 지역적응센터가 있음). 교육등이 개설되면 연락이 와서, 아이를 위한 눈높이 교육도 신청해서 하고 있음. 많이 도움이 됨. 미술, 한글공부, 놀이치료 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음.

이OO: 저는 지역적응센터에서 근무를 하니깐, 지역적응센터는 초기 전입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서 케어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오래된 사람들, 취업한 사람들은 지역적응센터와 거리가 멀어짐. 그런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오래도록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에 요청을 해도 될까? 하게 됨.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우려가 생김. 수급자분들은 잘 이용하지만 취업한 분들, 오래된 분들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

연OO: 이OO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되어가면 지역적응센터에서 연락을 잘 안함. 저도 애가 있으니 제가 먼저 센터에 연락을 했음. 2-3년 지나면 관리를 잘 안해주는 것 같음. 지속적인 게 있으면 좋겠음. 일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사는 게 더 어려움.

□ 지역적응센터 외 지역사회 내 다른 기관 이용 경험

- 참여자 상당수는 지역적응센터 외에 지역 복지관, 남북하나재단, 새터민 지원센터, 적십자, 장학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

있음. 특히 학비, 생활비 등의 형식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거나 언어교육,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교육 관련된 지원 경험이 많았음. 또한 산후도우미 등 산후조리 관련 지원도 받음.

- 새로 설립된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3명으로, 이외의 참여자들은 센터가 설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에 설립된 남북통합센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
- 하나포털사이트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주로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 밴드, 우리온 사이트((사)우리온에서 운영하는 탈북민 정착정보 제공 홈페이지. (사)우리온은 2015년에 카카오토티와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민 정착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9년 통일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됨.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정착 지원정보를 홈페이지(<https://woorion.net>)와 유튜브(우리온TV)를 통해 제공하면서, 교육사업으로 탈북청년을 대상으로 DnL(Democracy and Leadership) School도 운영하고 있음. 또한 남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진로/취업, 학업, 법률, 대인관계, 의료, 육아, 금융 등에 대한 탈북민 멘토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음) 등을 통해 탈북민 관련 소식과 정보를 얻고 있었음.

박OO: 근처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심. 김치, 라면도 가져다 주심. 자주 연락을 주심. 처음에는 지역적응센터에서 복지관의 복지사님을 소개시켜주셨음. 복지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연OO: 적십자 도움을 좀 받았음. 하나원에 데리고 왔던 분이 적십자 회장님이셔서, 애들 출산할 때 용품이랑 그런 것 지원을 받았음.

이OO: 살고있는 인천지역에 새터민 지원센터가 있음. 탈북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학력 인정을 못받다 보니까 한국에서 추가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음. 대학교는 입학해서 장학재단이 있는데, 학점만 유지하면 졸업할 때까지 매월 50만원 씩 생활비 식으로 지원을 해줬음. 지원을 받으니까 따로 아르바이트를 안하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음.

안OO: (새로 설립된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대해 알고있는지?) 네. 탈북민들끼리 소그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소개도 하고 상황도 공유하는 프로그램에 일주일 정도 참여하였음.

이OO: (남북통합문화센터) 그런거 자체가 있는 거를 처음 들음. 지역적응센터만 알고있지 그거는...

박OO: (하나포털사이트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연OO: (하나포털) 사이트는 가끔씩 들어가 봄.

이OO: 우리온이라고, 회사라 해야 하나? 그 사이트에 공지가 계속 올라옴. 우리온이라고 사이트가 있음. 페이스북도 있고. 거기에서 보고 신청함.

□ 심리상담 경험

○ 참여자 중 반(9인 중 4인)이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적응이나 직업 관련 상담이 아닌 심리상담을 받은 참여자는 단 한 명으로 조사됨.

○ 이외 참여자들은 남북통합문화센터나 다른 기관에 직접 상담을 요청하였다고 응답함.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참여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등 상담 효과에 대해 만족하였음.

이OO: 지역적응센터에 보면 내국인(남한사람)들이 대부분 함. 내국인이 매칭이 된 분들은 일단 속마음을 담고 말을 안함. 누구랑 매칭되느냐에 따라 상담을 하고 안하고가 결정이 나게 됨.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탈북민이 이런데 있어야 상담도 하고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OO: (지역적응센터에서) 심리상담은 아니고 사회적응 이런 상담이라던지, 진로 이런 거는 받아봤던 것 같음.

동OO: 아이 놀이시간에 스스로도 심리상담을 신청해서 받았음(통합센터에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짐. 부부관계, 인맥 등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데,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짐. 상담사분도 같은 새터민이니까 많이 공감해주심. 지역적응센터에서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생활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듣지 못했음.

□ 지역사회 내 사회관계망

- 상당수의 참여자들은 하나원이나 지역적응센터에서 함께 교육받은 동기 등 탈북민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음. 언어나 사회적응 등의 이유로 북한 사람보다는 남한 사람과 교류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로 학교, 직장, 취미생활 등을 통해 만난 남한사람들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으로는 혼자 해결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털어놓기, 또는 지역적응센터나 경찰 등에 요청하기 등 다양하게 조사되었음.

안OO: 저는 한국에 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적응한 문화생활 등을 맞춰가려고 노력한 것들이 흐려짐. 같이 대화하다 보면 북한 사투리 등이 나오게 됨. 지금도 만나는 탈북민은 없고 다 한국친구들임.

이OO: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 같이온 사람들 하고는 연락 잘 안함.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랑 있다보면 어쨌든 한국에서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데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게 더딘 것도 있고, 그곳에서 생활한 시간들이 좁혀지지 않음. 그래서 하나원 동기들이랑 연락 하나도 안함. 지금은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불링동호회를 개인적으로 다니는데 동호회 생활한 지 2~3년 넘었음. 거기에서 많이 얘기하고, 또 남자친구? 정도인 것 같음.

유OO: 일단은 큰 사기같은 걸 당했다고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경찰한테 연락을 드릴 것 같고, 그 이외에 또 해결할 수 없는 고충 같은 게 생긴다면 지역적응센터에 연락할 것 같음. 주변 친구들한테 도움도 구하고....

□ 5년 이상 거주한 탈북민 또는 탈북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

- 심화 교육이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 경력단절과 재취업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탈북민 자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현재 탈북민 자녀 지원은 북한출생 자녀가 주 대상이며, 중국 등 제3국 출생 또는 남한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남한출생 자녀의 경우, 같은 탈북민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당하고 있음.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음.

박OO: 학생이다보니,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더 수준 높은 깊은 (심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OO: (5년 이상 거주한 탈북민 또는 탈북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제도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아이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음. 아이를 지인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북한에서 데려온 아이들은 다른 혜택이 있는 것 같음. 근데 저희는 같은 북한에서 온 부모인데, 저희는 여기서 출생을 했다고 해서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학원같은 것도 사교육도 못시키고 있음. (중략) 중국에서 온 애들도 그에 맞게 따로 지원이 있는 것 같음. 근데 일단 여기서 출생한 애는 아예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해서 지원을 못받고 하는데, 일단은 수입은 저는 한국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 시작점부터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이OO: 일단 중국에서 넘어온 애들도 북한에서 넘어온 애들보다는 빈약한 것 같음. 근데 그나마도 그건 괜찮다고 봄. 근데 남한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도 못받고 그게 속상한 것 같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애를 하나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서 북한에서 아무것도 없이 빈주먹으로 남한테서 정착하면서 키운다는 것이... 일단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책임지고 키운다고 하지만은, 엄마도 노력해야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라를 위해서.

다. 세부사업 3: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현황 조사

(1)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실무자 설문조사

□ 지역적응센터 운영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12월 현재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 운영
 - 서울 4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인천,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각 1개소(그림 8)
 -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적협동조합 1개소, 사단법인 11개소, 공공기관 4개소 위탁 운영
- 지역적응센터는 2006~2011년 사이 탈북민이 대거 입국하면서 2009년 6개 시범센터 운영으로 시작하여 2013년 32개소까지 확대됨.
- 2012년 이후 입국 탈북민 수가 감소하면서 센터 통합을 통해 2021년 현재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적응센터 매뉴얼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하는 탈북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여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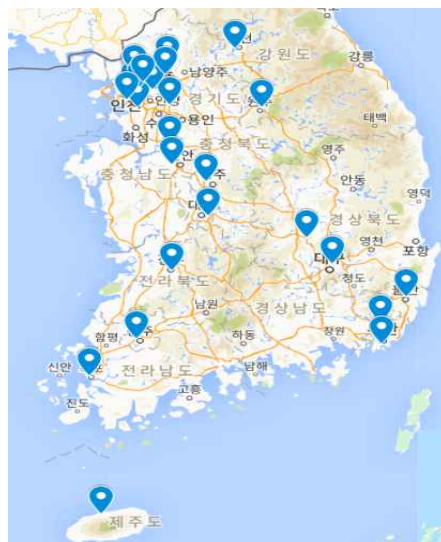


그림 8. 전국 지역적응센터 위치

- 설문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는 사무국장 58.3%, 팀장 41.7%이며 이들의 근무경력은 대부분 6년 이상으로 그 비율이 75.0%로 나타남.
- 지역적응센터의 상근직 종사자는 평균 8.7명이었으며, 그 중 탈북민 전문상담사는 평균 2명 포함되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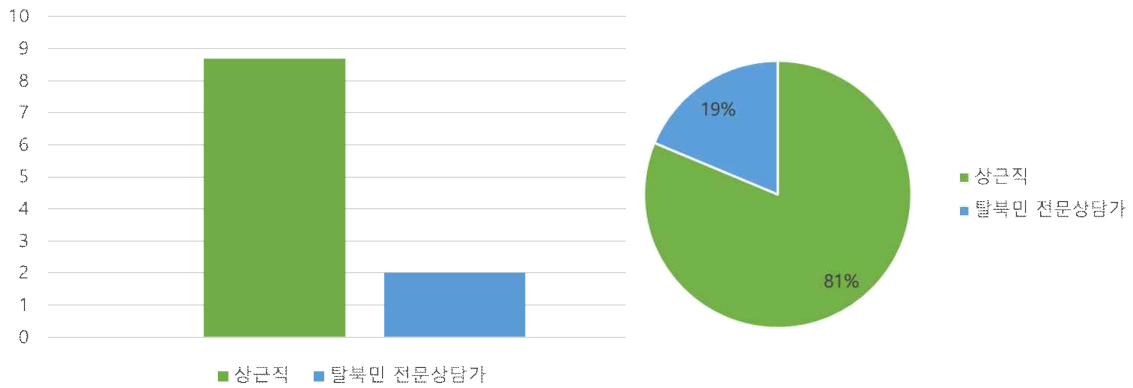


그림 9. 지역적응센터 근무 인원 및 비율

- 지역적응센터의 예산은 통일부 보조금, 시도 보조금, 기초단체 보조금, 공모 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예산 규모는 2억 ~ 4억 미만이 66.7%로 가장 많았고 통일부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의 규모는 3천만원 ~ 1억 미만 이 66.6%를 차지함.
- 지역적응센터의 예산 원천의 경우(응답 중복 선택이 가능하였음) 통일부 보조금이 100%, 시도보조금(사업비) 83.3%, 기초단체보조금(사업비) 51.7%, 공모사업비 5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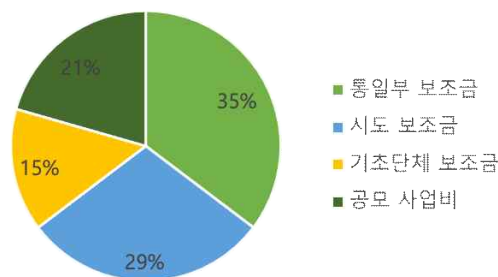


그림 10. 지역적응센터 예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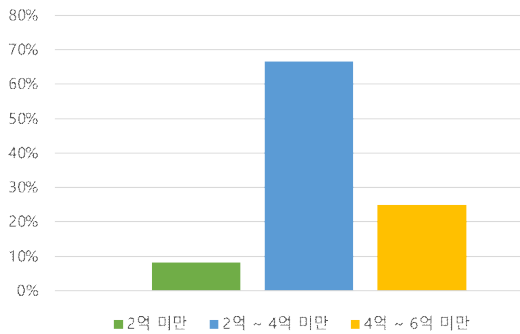


그림 11. 지역적응센터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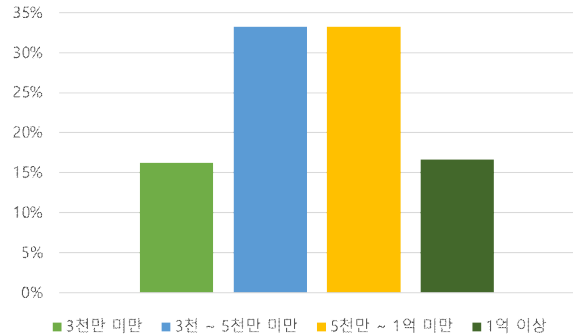


그림 12. 지역적응센터 보조금 제의 사업비

- 센터의 운영 형태는 복지재단 혹은 복지기관 위탁 운영이 50.0%, 기타 (민간단체, 사단법인, 사단법인 위탁 운영, 특수법인, 비영리법인)가 50.0%로 나타남.
- 센터에 등록된 탈북민은 평균 300~500명으로 나타나며, 센터에 등록된 탈북민 중 센터 프로그램에 1년에 한 번 이상 참여하는 비율은 회원의 50~70% 미만이 50.0%, 회원의 70% 이상이 50.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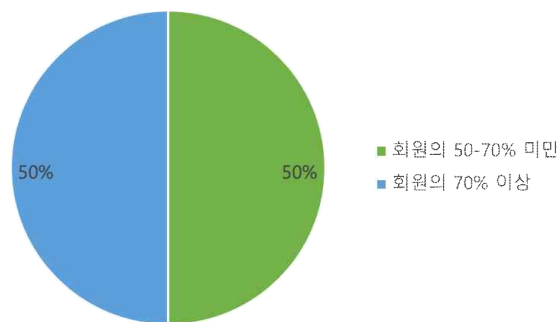


그림 13. 지역적응센터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탈북민 회원 비율

- 코로나19 이후 참여자의 감소가 있었던 센터는 88.3%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보호기간 종료 탈북민의 센터 프로그램 참여 비율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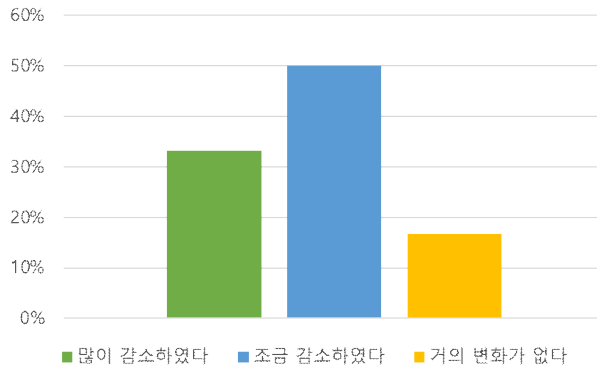


그림 14. 코로나19 이후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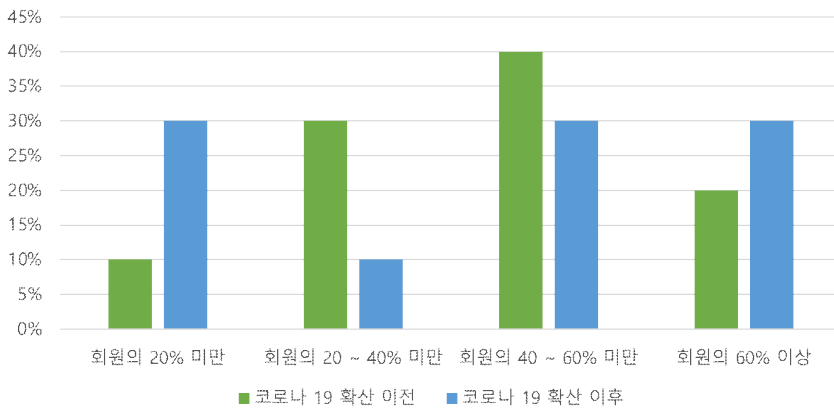


그림 15. 코로나19 전후 보호기간 종료 탈북민의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참여 비율

-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의체는 응답한 모든 지역적응센터에서 구성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센터는 91.7%를 차지함.
- 지역적응센터는 현재 초기집중교육에서 지역적응사업으로 서비스 주안점이 전환되고 있으며 탈북민 가족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단위의 서비스 필요도 높아진 상황임.
- 이에 사례관리, 위기가구 발굴 비중이 커지며 센터의 역량을 초과하는 업무량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함에도 지역적응센터의 사업 및 탈북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가 낮음.
- 센터에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여 이직율이 높고 그에 따라 탈북민과의 관계 형성이 어려움.

□ 탈북민의 정착 지원 제도 인지도 및 활용도

- 정착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정착 지원 제도는 취업장려금, 직업훈련비 및 수당, 정착도우미제도, 미래 행복통장, 심리상담, 교육지원금, 대학 특례 편입학,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 고용지원금 순으로 인지도가 높음.
- 반면 활용도의 경우,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직업훈련비 및 수당, 교육지원금, 정착도우미제도, 대학특례 편입학,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 심리상담, 고용지원금 순으로 점수가 높음.
- 취업장려금 제도는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착도우미제도, 심리상담, 고용지원금의 경우 인지도는 높아 탈북민이 제도를 잘 알고 있음에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지도에 비해 제도를 잘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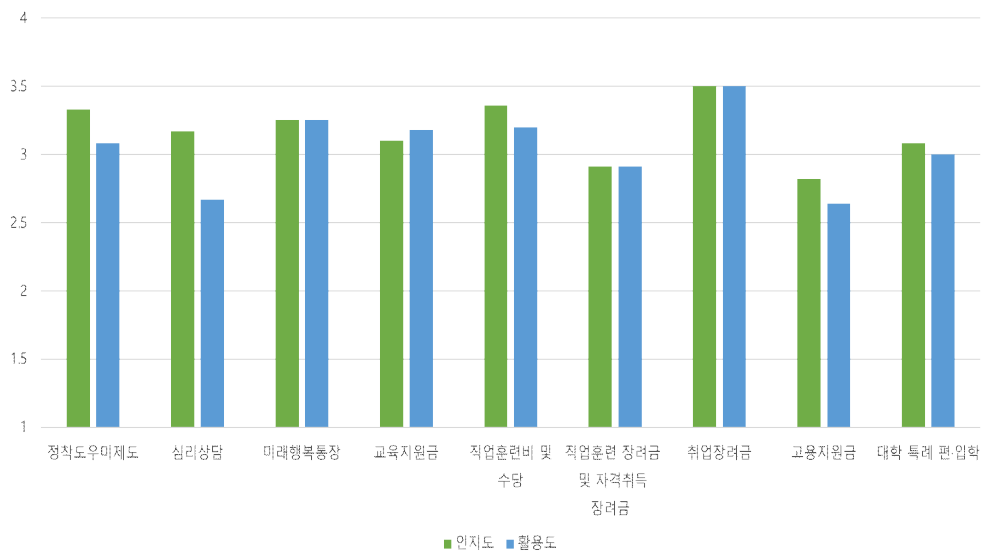


그림 16. 지역적응센터 실무자가 응답한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범위: 1~5점)

□ 탈북민의 정착 지원 서비스 요구도

- 탈북민의 서비스 요구도는 입국 후 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정착 초기에는 경제적 지원, 취업 연계, 취업 훈련 등의 순으로 요구도가 높음.
- 보호기간 종료 탈북민(정착 5년 이후)은 경제적 지원, 의식주 생활관리, 심리 및 가족상담, 집중사례관리 순으로 요구도가 높음.
- 탈북민 가족유형이 다양해지고, 가족단위 서비스 필요가 높아졌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취약성이 더 커짐에 따라 긴급지원 요구도 높아짐.
- 가족 재결합 및 정착, 자녀양육,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서비스 필요도 높으며, 교육 프로그램보다 행사성 프로그램 요구도와 참여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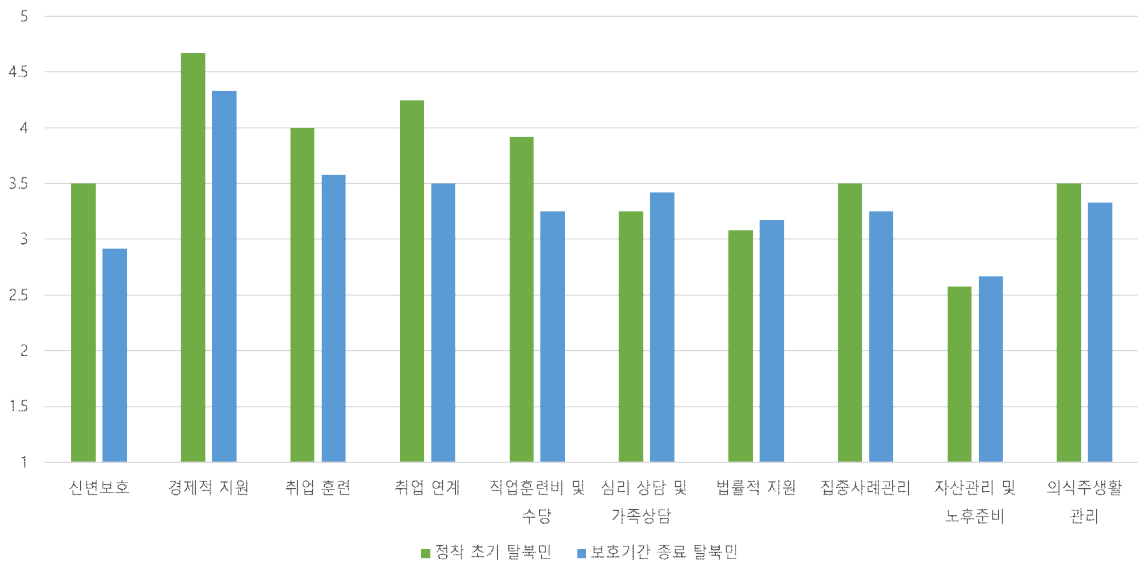


그림 17. 지역적응센터 실무자가 응답한 탈북민 정착 지원 서비스 요구도

(범위: 1~5점)

□ 보호기간 종료 탈북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사업

○ 생계 및 경제적 지원

- 보호기간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호소이며, 몸이 좋지 않아 취업을 못하거나, 지역에 부적응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편임.

○ 가족지원

- 최근 제3국 출생 자녀, 중국인 남편을 한국에 데려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가 다르고 제3국 출생 자녀, 중국인 남편이 한글을 몰라 더욱더 어려움을 겪어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함.

○ 심리상담

-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경제적인 자립을 하지 못하여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울과 불안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음.
- 코로나 이전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이 지역적응기관으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전입지원이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 오래 전 전입하여 지역 내에서 지역적응센터와 연계를 가지지 못한 취약계층(경제, 정신, 건강) 탈북민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것 등이 필요함.
-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정착 탈북민들이 새롭게 발굴되는 경우가 많음. 전입 초기에는 북한으로의 송금, 당장의 생계문제 해결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 전문기관의 연계를 거부하는 탈북민들이 많기도 하며 전문기관에서의 탈북민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역 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탈북민들의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의료 지원

- 중증질환자들의 간병 치료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이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 발굴 시 긴급지원체계가 필요함.

○ 교육 프로그램

- 임대 주택을 벗어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가꿀 수 있는 교육, 재무설계를 통해 규모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함.

○ 기타

- 가족합류(제3국자녀/출산) 및 생애주기별 재정착 과정에서의 위기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찾아가는 전문자원 연계형태의 활성화가 필요함. 특히 정신건강, 미취학자녀 성장발달 관리 분야 등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절실함.
- 타겟형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탈북민 대상 서비스 및 센터 운영의 어려운 점

○ 인력 부족

-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사업, 사례관리, 취업지원 등 센터에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각 부처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의 종류/질은 높아지고 있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잦은 야근, 주말 프로그램 진행 등 시간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과중으로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음.
- 취업을 제외한 프로그램과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상담사 포함 총복에 4명 정도임. 4명이 모든 프로그램과 상담을 하려면 대상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사례관리팀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 구성이 절실함.
- 탈북민들의 정착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나 채워져야 할 욕구

들은 매우 복잡적이고 장기적이므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함. 특히 초기 전입 탈북민들의 경우,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욕구들이 많아 사례관리자는 이에 대한 빠른 정보 습득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전입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년 100명 이상)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신규자 사례관리뿐 아니라 기정착 집중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해야 하는 필수 고유 업무 등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지원대상의 확대와 전문 자원 부족

- 기존 지역적응센터는 조기정착 중심 지원형태로 정착분야별 지원사업 및 사례관리 형태를 유지해왔으나 2019년 관악구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재정착과정에서의 위기 가구 집중지원 형태가 되면서 정착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확대됨.
- 정착 5년 이내 중심 지원형태에서 거주 인원 전체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 자원 확보의 영역이 또 다른 현장의 애로사항임.
- 탈북민 위기 필요에 따른 정책방향성은 거시적으로 제시되지만, 지역 내 실질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협력 자원들의 민감도 및 수용도는 낮아서 협업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부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지역적응센터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 현 제도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적응센터는 독립된 법적 기관이 아니며 독립적 사업자 번호가 없음.
- 지역적응센터가 법적 기관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서비스 대상을 파악하기 힘들. 지역적응센터에는 센터가 2010년 개소된 이후에 대한 지역 거주 탈북민에 대한 대상자 정보는 있지만, 그 이전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전입자, 전출자에 대한 정보도 대상자들이 직접 지역적응센터에 알려주지 않는 한 파악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 지역적응센터는 독립된 시설이나 기관이 아닌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한 법인이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를 받아 위탁 운영하다가 평가 및 재지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운영하기도 함. 이에 탈북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탈북민들의 저조한 참여율

- 심리정서, 가족상담 등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여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며 단순 행사성 사업, 현물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
- 탈북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남한사회 부적응 등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부정적 인식으로 탈북민들이 서비스를 거부하여 설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사례관리 중 긴급지원 예산 미확보

- 탈북민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긴급지원이 할 경우가 많음. 센터 자체적으로 긴급 지원 예산은 없어, 연계를 통해 지원해야 하지만 심사하는 시간이 걸리고, 채택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 센터 자체적으로 심사 후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업무 지시 체계 부재

-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수렴되지 않는 업무지시와 자료요구로 불필요한 업무가 많음.
- 지역적응센터 외에 공식적인 탈북민 지원단체가 없어 탈북민 관련 자료, 현황 요청 및 협업 요구 등의 외부 기관 요구 및 지시가 과다함.
- 지역적응센터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실제 센터의 역량으로 적정선의 업무부여가 필요한 상황임. 지역적응센터는 부설기관도 아니며, 시설로 위탁된 것도 아닌 위탁보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센터가 제출한 사업계획 외에 업무를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함.

○ 지역적응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

- 탈북민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범위나 기준이 없어 서비스 제공 시 사례 관리자 혹은 기관의 주관적 판단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로 정착기간과 관계없이 초기전입자, 국내정착 10년, 20년 이상된 탈북민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적응센터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매우 잦아짐. 그러나 지역적응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한계가 있기에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안내를 진행하지만 지원 불가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협박, 욕설 등)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심리적 부담이 큼.
- 탈북민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종결이 없고 끊임없이 서비스 지원, 민원 응대를 해야 하며 지역 거주 탈북민들은 모두 사례관리 대상으로 체감되는 상황임.

○ 개인정보보호와 서비스 제공 절차의 충돌

- 탈북민의 경우 북한의 가족들 신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특별히 민감함.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서비스 제공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기에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존재함.

○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낮은 처우

- 지역적응센터의 종사자들에게 현 제도 하에서는 업무 강도나 업무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급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탈북민 지원 업무 자체는 숙련자가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인데 낮은 처우와 더불어 장기간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을 떠나는 종사자들이 많으며 장기 근속을 유지하기 너무나 어려운 구조임.
- 법인이 공공기관인 경우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음.

- 부족한 복리후생 제도 및 낮은 급여의 문제도 지역적응센터 입사 지원의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입사를 하더라도 업무의 과부화와 낮은 급여 등은 조기 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일을 하지만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급여 및 처우를 적용받을 수 없어 근속이 어렵고, 이에 지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지속성 없는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로 인해 탈북민들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음.

□ 코로나19 시기의 탈북민 서비스 및 센터 사업의 어려운 점

-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탈북민이 실업을 겪음.
- 외부활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경우 다니던 노인정, 복지관 등이 폐쇄되면서 말벗이 없어져 정서적 어려움을 겪음.
- 센터 사업 진행 시 특히 초기 전입자들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수도권외의 경우 주어진 예산은 많으나 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 내 신규 전입 인원이 없는 경우에 특히 계획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재택 수업 등으로 아이들 지도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들의 학습 및 돌봄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 주로 비대면으로 상담 및 사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대상자들이 느끼는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짐.

(2)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심층면접

-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3명(서울지역 2명, 지방 1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

□ 운영 현황과 문제점

- 지역적응센터는 통일부가 제작한 운영 매뉴얼에 언급된 바와 같이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 저비용 고효율 정착 지원체계 구축의 목적으로 독립된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대신 기존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의 하위 팀으로 운영하여 독립적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움(독립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음).
- 통상적으로 위탁법인 기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여 상시 의사결정과 사업 관리가 어려우며, 실제 운영은 사무국장이나 팀장 등 중간관리자가 대리하는 체제임.
- 공간적으로도 위탁법인과 센터 사무실 및 교육공간을 공유하여 외부적으로 독립된 기관임을 알기 어려움.
-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중화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소속 법인 회계 관리 시스템도 사용하여 행정관리 시스템이 복잡함.
- 인건비 호봉체계의 상한선(팀원 10호봉, 팀장 12호봉, 사무국장 17호봉)이 존재하고 시간외 수당이 인건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보다 보수가 낮음.
- 인건비 문제로 경력 있는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움. 공공기관에서 운영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단기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서울○○센터 실무자) 지역적응센터가 복지관 안에 있으면 어쨌든 복지관 법인 안에서의 시스템에 구속될 수밖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지역적 한계 안에 지역적응센터가 들어오다 보니, ‘여기는 ○○구 사람만 이용하거야’ 라는 지역적인 편견도 있을 수 있기도 함. 구조상으로 시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실적도 운영 법인 안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 구조. 따라서 이곳은 1) 서비스 팀 2) 사례 관리 팀 3) 지역적응센터 팀으로 되어있어 기관이 아닌 것임

(서울○○센터 실무자) 근무 인원이 적어 설득 구조가 정말 어렵고 그 어려운 구조 안에서 굉장히 업무 내용은 강도가 있고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국정원 다음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임. 정보화 시스템도 되게 복잡하고 업무 구조는 굉장히 고도화. 하지만 시설과 역량에 대한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센터 담당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움.

(서울○○센터 실무자) 사회복지관 조직이 크지 않고 조직의 변화가 높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응센터 사회복지사들은 큰 비전이 없는 것. 팀장 될 일도, 사무국장 될 일도 그렇게 크지 않음. 그러니까 개인 비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음. 수당 체계에서 시간 외 수당과 같은 것이 없음. 근무 조건에서 열악함을 느끼니까 복지관 안에서도 하위 단위 사업 같고 우리가 주인이 아닌 느낌을 받음. ‘복지관에 셋방 사는 느낌’임

□ 사업 현황과 문제점

- 지역적응센터의 일차적 기능과 사업은 신규전입자 대상으로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초기정착 및 생활(하나원에서 퇴소하는 전입자를 인솔하여 일대일로 주택계약, 아파트 입주, 지역 안내, 교육 안내 등)을 지원하는 것임.
- 거주지 보호기간인 입국 후 5년 이내 탈북민을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센터가 운영되어 왔으나 탈북인구 감소와 탈북민 관련 사건 발생으로 최근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이 변화함.

-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연 2회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탈북민 대상 사례관리 사업을 강조함.
-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로 사업 주안점이 변경되면서 입국 시기와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탈북민이 센터의 사업 대상이 되어 입국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센터의 사업 대상이 늘어남.
- 집중사례관리를 하기에는 센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 상대적으로 센터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에도 한 센터가 담당하는 구역이 넓어서 종사자 한 명이 기초 지자체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임. 지방의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센터 인력이 부족함.
-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이 필요한데 지역의 타 기관들의 경우 대부분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 연계를 지원해도 탈북민들이 다시 지역적응센터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음.

(서울○○센터 실무자) 탈북모자사건 전까지 지역적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조기 정착 지원이었음. 그래서 신규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한 교육이 업무의 높은 비율을 차지. 이제는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거의 80% 이상이며 20% 정도가 기타 프로그램이나 자조 모임 등의 업무임.

(서울○○센터 실무자) ‘위기 가구 사례관리’는, 위기를 발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발굴된 부분을 또 어떻게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 참여시켜, 문제 해결력을 높이느냐가 핵심임. 하지만 현재로서는 위기 대상을 얼마큼 발굴했는지에 초점이 되어 있어 실무자로서는 발굴이 두렵기도 한 상태임. 특히, 정신 건강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 많은데 약물 치료, 병원 동행 등 챙겨야 할 많은 부분에 대해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부족하고 공백이 많아 개입에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려움.

(강원○○센터 실무자) 상반기, 하반기 위기 가구 전수조사를 함.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대상자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전혀 모르는 대상자 이름과 연락처와 생년월일이 나오고, 이분들이 왜 전수조사 대상인지까지가 나옴. 하지만 막상 잘 지내시냐 확인을 하면 어떻게 자기 번호를 알았냐

고 하면서 화를 내심.

(강원○○센터 실무자) 통일부에서는 무조건 조사해서 보내라고 하고, 관할지역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센터잘못이라는 식의 업무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민간 영역에서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함. 지자체에서 먼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협조해서 같이 이거를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통일부에서 재단으로 넘기고 재단에서 지역 지역적응센터로 넘김. 그럼 하나 센터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주민센터나 지자체, 경찰서에 전화해서 알아내야 함.

2) 사업 2: 탈북민 대상 생활안전망 구축 정책 대안 도출

가. 세부사업 1: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

(1) 전달체계 관련 문제점

- 탈북민 대상 정착 지원 체계는 탈북민정착 지원사무소(하나원, 1999년 설립), 탈북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10년 설립),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2009년부터 설립 시작) 등으로 초기 정착 지원부터 거주지 보호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단계별로 전달하는 구조임.
- 정착 지원 체계가 단계별로 잘 갖춰져 있으나, 실제 전달체계의 구성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님. 2007~2009년 탈북민 입국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민간에서 지역적응센터가 먼저 생기고 사업을 총괄하는 재단이 이후에 생김.
-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적응센터는 통일부 보조금을 광역지자체를 통해 받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받으며, 3년 주기의 위·수탁 과정은 광역지자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광역지자체의 3중 보고체제로 인해 비효율적인 센터 운영 및 관리 감독이 발생함.
- 입국 탈북민 규모에 따라 여러 인프라가 설치되었다가 폐지되는 과정(예: 심리안정지원센터 2016~2019년 운영 후 폐지)을 거치고, 현재 안전지원센터, 트라우마센터 등 새로운 인프라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달체계 간 사업 중복(예: 심리 서비스)이나 관리·평가에 대한 민원, 종사자 지위 및 처우 문제(예: 남북하나재단 파견 전문상담사 vs. 위탁기관 종사자) 등 다수의 갈등 요인이 존재함.

- 거주지 보호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차적인 서비스 대상은 5년 이내 입국자이지만, 실제로는 5~10년 사이 탈북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10년 이상 탈북민도 있어서 서비스 대상이 광범위함.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2000년대부터 탈북민 입국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가장 많았을 때는 2007~2009년. 연 3천명 정도씩 매년 들어왔음. 이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생겼고, 민간에 지역적응센터가 먼저 생김. 센터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이 먼저 있어야하는데, 12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 그 과정을 보면 2009년 지역적응센터 설립, 2010 남북하나재단 설립, 이후 하나원 설립(안성 본원, 2012년 화천 본원). 하지만, 점차 입국자가 감소하는 상황이라 탈북민에 대해서도 인프라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잘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공감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지역적응센터의 업무와 남북하나재단의 업무가 겹치기도 하고, 예산이 별도로 정부에서 내려오는데도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정착 지원체계의 문제임. 이 문제에 대해 통일부가 하부조직이 없음을 꼽을 수도 있음.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2009년 이후에는 사실 탈북민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 전에 많이 왔는데 오히려 취약한 사람들은 기관이 설립하기 이전에 오신 분들이 많음. 보호 기간인 5년이 끝난 사람들, 10년 이후에 문제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음. 지원제도나 의지로 인해 전에는 잘 살았지만, 그게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이후 적응이 어려워 양극화가 심해지기도 함. 시작은 같은 정착금이나 임대주택에서 시작하지만, 이후 누굴 만나고 어떻게 진로나 정착금 등을 활용했는가에 따라 양극화가 발생함.

(2) 종사자 관련 문제점

- 전문상담사 제도는 2010년에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 심리/생활 전문상담사와 취업 전문상담사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2021년 현재 전국에 약 90명이 활동 중임.
- 지역적응센터 종사자와 남북하나재단 파견 전문상담사로 이원화된 인력구

조임. 종사자와 파견 상담사 간 보수, 처우가 다르고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임.

- 전문상담사 중 심리/생활 전문상담사는 심리상담과 생활지원 상담을 동시에 담당하는 역할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전문 심리상담사에 맞는 처우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지역적응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은 어려운 편임.
- 지역적응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수탁법인에 따라 다르고, 일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보다 낮아 이직률이 높음. 높은 이직률은 탈북민과의 관계 형성과 안정적 사업 운영에 장애가 됨.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탈북민은 입국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거쳤고, 그에 따라 굉장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2-3년차 초년생이 대부분임. 탈북민에 대한 '알아차림'이 능숙한 현장가도 없을 뿐더러, 아직 미숙하다보니 상처도 받고 탈북민을 잘 이해하지 못해 탈북민도 답답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김. 지역적응센터의 역사가 10년이지만 초년생들만 많은 이유는 3년마다 위탁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충분한 경력을 우대하는 충분한 처우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임.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센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는 남북하나재단과 지역적응센터의 서비스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지역적응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함. 지역적응센터 사회복지사들도 사례관리를 해서 자원 연계를 하는 '생활상담'을 하는데 동일한 업무를 심리/생활 상담지원의 전문상담가가 하고 있기 때문임.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역할 배분이 어렵거나 평가의 측면에서도 생활상담까지 심리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발생하기도 함.

(3) 서비스 이용자 관련 문제점

- 지역적응센터는 탈북민 중 지역적응센터 설립(2009년) 이전 입국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2009년 이전 입국자들은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서로 연결되기 어려움.
-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이수자들끼리 서로 잘 모르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자생적인 자조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09년 이후 입국하여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을 이수한 탈북민은 대부분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다가 결혼, 출산 등 생애사건 경험 이후 필요가 발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탈북민에 대한 정기적 연락, 네이버 밴드를 통한 수시 정보제공 등으로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활을 지원하고 위기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음.
- 탈북민들도 지역적응센터의 연락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선호함.
- 일부 지역적응센터의 경우 기존 탈북민단체 등에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탈북민 간의 연락을 권장하지 않음. 탈북민 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에 장애 요인이 됨.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탈북민 중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도를 활용함. ‘아는 사람은 배터져 죽고, 모르는 사람은 배고파 죽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임. 지원을 많이 받아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있음. 오히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제도를 잘 모름. 제도를 너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있음. 이렇게 탈북민은 다양한데, 여전히 덩어리로 탈북민을 어떻게 지원할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을 앞으로는 하나하나 지원해야 함

(남북하나재단 실무자) 제도 이용률(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가입률은 30%

가 안됨.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낮음.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이어주고 도와주는 것. 현장에서 생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려고도 안하고, 탈북민 사회에 잘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함.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잘 적응한 것으로 봄. 성공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도 거절하기도 함. '보통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임.

(탈북민단체) 지역적응센터의 구성은 하나원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정착도우미로서 탈북민에 대한 단독 특별관리를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지역정착을위해 봉사나 물품지원 등으로 나눔. 하지만 여기에서 봉사자들이 차라리 한국생활에서 정착을 잘한 탈북민이면 나았을텐데, 한국사람들이 운영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울타리가 있음. 그래서 탈북민들조차 지역적응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어려움.

나. 세부사업 2: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세션 구성

(1) 발표 1: 탈북여성의 가족관계와 심리정서적 건강

▷ 발표자: 김희정(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주요 내용: 탈북여성의 트라우마, 가족관계, 심리정서적 건강의 특성 등

○ 서론

- 연구 목적: 탈북여성의 제3국에서의 외상경험과 트라우마, 자녀양육과 가족관계, 심리정서적 건강의 유기적 연결성과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 고찰

○ 연구방법

- 참여자: 탈북여성 15명(연령대 26-51세), 대부분 중국 또는 한국 출생 자녀가 있음. 배우자는 한족, 남한 주민, 북한 주민, 조선족 등 다양함.
- 조사 방법: 2021년 4~5월 심층면접(비대면, 줌)
- 조사 내용: 트라우마, 자녀 양육, 일상생활 적응 등

○ 연구결과

- 북송위협과 인신매매 혼

- 탈북여성들은 중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강제결혼,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 신분 가장, 숨어살기, 대가 없는 노동 등 자유를 속박당함.
- 인신매매는 공안으로부터의 위협과 복송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며, 임신 및 출산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가출 역시 다른 생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인신매매 대상이 되는 상황 발생
- 복송 이후의 삶은 교화소에서의 강제노동, 고문, 강제 낙태, 마취 없는 수술과 같은 비인권적 경험

● 트라우마와 심리적 문제

- 탈북여성들은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트라우마와 악몽, 우울과 자살 충동, 정서 및 충동조절 문제를 겪고 있음.
-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 경험은 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며 수면곤란 혹은 장애와 동반하여 나타나기도 함.
- 탈북여성들은 활력 수준이 침체되고, 쉽게 울음을 터트리거나 슬픔 기분을 느끼는 등의 우울감을 호소함. 또한 누적된 불안과 상처, 낮은 자존감은 타인에 대한 불신, 자살충동, 술과 약물 의존 등으로 나타남.
- 탈북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분노 혹은 공격행동을 남편이나 자녀에게 표출함. 또한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적대감, 폭력 감정들이 트라우마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며, 해소방법 역시 소극적 차원에 그쳤음. 탈북여성이 정서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 이로 인한 죄책감과 실망감이 우울감으로 악순환됨.

● 가족 문제

- 탈북여성들은 이중삼중의 가족관계, 자녀와의 분리,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등을 겪고 있음.
- 탈북여성들이 탈북 이후 한국 정착하기까지 기간(본 연구 참여자의 경우, 평균 8.3년) 동안 형성된 가족관계는 복송 위협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어 불안정함. 북한과 중국에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는 과정은 “온전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진통의 시간임. 이중, 삼중의 가족관계에서 드러나는 “비극”은 자녀 출산과 양육, 이별, 재결합의 과정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와 연결됨.
- 탈북여성이 겪는 가장 큰 가족 문제 중 하나는 자녀와의 분리임. 탈북여성의 신분의 불안정성은 자녀와의 분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모자 모두에게 정신적 어려움을 가중시킴. 자녀와의 이별, 원거리 양육, 그리고 자녀와의 재결합 과정 등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음.
- 자녀들은 부모와의 분리 경험, 탈북/탈중 과정의 트라우마, 해외 이주, 정체

성 혼란, 언어 및 문화 차이, 학력 결손 및 학제 차이, 어머니에 대한 불신과 원망, 새 가족관계 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 탈북여성은 자녀를 잘 양육하려는 의욕이 크지만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후회, 자녀에 대한 기대와 이해 부족, 부족한 양육 지식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 또한 가족 지원 부재, 남편과의 관계, 생업 및 구직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부가적인 어려움을 겪음.

- 중국에서 초대한 남편의 경우 언어 문제, 문화 차이와 더불어 구직, 취업 문제,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며, 탈북여성은 이런 경우 자녀 양육, 생업, 남편 지원의 역할을 모두 전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됨. 환경 변화에 따른 기대 역할 변경으로 갈등을 겪기도 함.

- 탈북여성의 대응 방식

- 탈북여성은 의도적 회피와 차단, 부정(denial)과 사소화(trivialization), 소극적 비노출과 자기 은폐 등의 대응방식으로 대응함.
-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극복 전략은 회피와 차단으로 고통스러웠던 과거 경험의 기억으로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차단함.
- 과거의 경험에 대해 탈북여성은 다른 사람과 달리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았거나 힘들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경향이 있음. 부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면하지 않고 사건의 의미와 영향을 축소하고자 하는 심리적 기제임. 특정한 과거를 스스로 왜곡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함.
- 탈북여성은 탈북민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함께 불안정한 정체성을 갖고 생활함.
- 가족과 자녀, 종교와 봉사, 자기 성찰과 긍정적 해석은 탈북여성의 회복탄력서 요인이 됨. 탈북여성의 생애에 가족은 빛이면서 그림자임. 탈북여성은 신앙과 봉사를 통해 삶을 재해석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도 함.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함.

○ 결론 및 논의

- 결론

- 북한에서 시작된 인신매매, 강제 복송 등의 인권침해가 현재 탈북여성의 정신건강과 가족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중국에서의 신분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안 필요.
- 자녀와의 관계에서 탈북여성들이 상실감과 상처를 경험하며 그 자체가 트라우마가 됨.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지원이 필요.
- 반복적인 외상경험, 트라우마에 따른 우울, 불안, 관계 회피와 고립 등 탈북여성의 심리정서적 건강이 문제가 됨. 탈북여성이 신뢰하는 사회적 관계망

을 통해 가족 및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지원 필요.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복적 탄력성을 보이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탈북 여성의 노력과 의지, 가족을 위한 노력과 희생, 신앙과 봉사, 성찰 등에 대해 주목해야 함.

- 연구의 의의

- 탈북여성의 복송경험 및 트라우마가 가족 형성과 유지, 가족의 재결합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탈북여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함.

- 정책 제언

- 탈북여성의 중국에서의 인권 개선 요구 필요
- 개인별 심리 치료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상담 및 치료개입은 입국 초기 적응 기관인 하나원에서부터 지역사회 정착 이후 지역적응센터로 연계되어 탈북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관계 회복 및 치료 지원으로 확대 필요
- 탈북여성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관심 필요

(2) 발표 2: 탈북민 가족상담의 이해

▷ 발표자: 김지향(남북하나재단 상담팀장)

▷ 주요 내용: 북한의 변화와 탈북선택, 정착과정, 탈북민 상담의 특성, 가족상담사례, 정책 제안 등

○ 북한의 변화와 탈북 선택: 시대적 요구와 탈북의 딜레마

- 탈북민 관련 꼭 알아야 하는 용어: 고난의 행군, 생활총화, 토대, 성분
- 토대와 성분의 역할: 북한 사회정책의 기준이며, 북한체제 작동원리의 기본을 구성. '정치적계층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하는 대안이 상대적으로 빈약.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의 괴리를 낳는 근본원인. 행정적 배분에 기초한 '정치적계층화' 유지 및 강화로 인해 불평등 심화. 북한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자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 체제 유지의 고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요인. 탈북 동기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 탈북민의 정착과정: 탈북민 정착 현황 및 인구학적 특징
 - 여성 76%, 북한 국경지역 출신 79%, 20~40대 65%, 수도권 거주 65%, 남한 거주 기간 5년 이상 81%, 배우자 유 50%, 재북시 직업능력 취약자(무직, 부양자, 노동자 등) 85%, 고등학교 이하(남북 통합) 학력자 69%
 - 탈북 동기는 다양하고 복잡하나, 주된 공기는 경제적 이유가 많음.

- 탈북민 상담의 특성: 트라우마 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 탈북민의 특성
 -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 존재(트라우마 생존자의 특성)
 - 심리사회적 특성 요인 : 개인의 성장 발달 환경 (북한 가족과의 애착경험, 학력/지속, 영양, 긍정적 경험 등), 타문화로의 이주 경험 (직통/제3국체류기간/비자발적 가족구조 형성 등), 심리적 외상 경험 (재북 시, 제3국 체류 및 탈북 기간 중, 남한적응 중 외상). 복합트라우마 : 성폭력/가정폭력, 죽음(총살, 굶어 죽음), 꽃제비 생활
 - 심리사회적 특성 주제 : 신뢰, 선택과 책임, 개인의 욕구 표현 방법, 심리적 문제의 신체화 표현, 법적 해결 vs 사회적 해결,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심리적 외상, 이산가족의 생존자, 감정에 대한 이해와 태도, 직설 화법, 누적된 피로/결핍, 타문화 적응 과정
 - 탈북민과 만날 때 주의할 점 : 북한지도부와 체제를 비난/판단하는 언행 삼가(그들에게는 본질, 고향임), 탈북민이 “수혜자”임을 상기시키는 언행(의존성 강화와 수치심), 외국어 사용과 취조, 비교하는 듯한 질문과 태도(비언적 표현에 민감함)

 - 정착시기에 따른 상담 요구와 특징
 - 정착초기(~1년 전후): 생활상담, 정보제공 요구. 표면적으로는 생활상담과 정보제공을 호소하지만 이면에는 심리적 어려움과 트라우마 증상 등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음. 심리적 어려움이 보여도 내담자가 원하는 표면적 호소를 따라가며 지속적인 관계형성 필요
 - 정착중기(2~5년): 생활상담 + 심리상담(복합적) 요구. 정착을 잘 해 나가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므로 그에 따른 복합적인 상담 필요. 반복적인 어려움 호소가 많아지므로(생활, 건강, 대인관계 등) 어려움 이면의 반복 패턴에 대한 접근 필요
 - 정착 5년이후: 심층 심리상담 요구 증가. 자립/자활을 한 사람의 경우 지지상담 및 심층 심리상담 요구가 증가하고 자립/자활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생활상담 및 종합상담을 계속해야 함.

● 정착 지원 상담과 심리상담의 비교

- 정착 지원상담은 적응 중심의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
- 심리상담은 심층적 심리상담 겸 성장지향 상담

●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징

- 탈북 남성과 여성의 차이
 - 남성 : 유교적, 전통적, 경직됨, 감정표현을 거의 하지 않음, 여성보다 낮은 적응력, 말보다 주먹, 술.
 - 여성 : 남성보다 유연함, 남성보다 더 복잡한 심리구조와 욕구, 여성을 중심으로한 복잡한 가족구성, 육아와 생활유지 문제
 - 주된 문제해결 방법 : 남성(술과 싸움, 고립 등), 여성(약물, 병원의존, 이성의존 등)
- 탈북민 2세
 - 북한출생 : 본인이 탈북민이므로 각종 정부 혜택 수혜.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 부모와 10여년 떨어져 지내다가 재결합한 가정이 많음. 복잡한 가족구조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가중. 연령에 따라 학업지속의 어려움 증가.
 - 중국출생 : 탈북민은 아니므로 정부 혜택 수혜자 아님. 대부분의 자녀가 이에 해당함. '이중언어' 장벽으로 적응의 어려움 발생. 조금씩 제3국(중국) 출생 자녀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나 아직은 정착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남한출생 : 일반 남한국민과 동일함.
 - 공통사항 : 자녀 모두 입국 연령 및 정착 시기가 어릴수록, 부모(주 보호자)와의 생활과 적응이 안정적일수록, 자원이 안정적일수록 정착을 잘 하며 학업 유지도 높음.

○ 탈북민과 함께하기

- 탈북민을 상담하는 상담자의 자세와 역할 =“상담자의 마음 준비”, “상담자의 민감성 훈련
- 일반상담과의 다른 점 : 발로 뛰는 ‘찾아가는 상담.’ 앉아서만 있으면 안 됨. 실제적인 정보와 도움이 함께. 능동적 상담 필요. 역할에 따른 스위치 전환 (ON/OFF), 구조화의 전쟁 => 한계설정 정확히!!

○ 개인을 넘어선 공공의 선과 공존

- 도움 되었던 경험
 - 지속적인 관심과 친밀함 유지
 -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조
 - 각자의 역할 충실과 존중, 건강한 경계 유지

- 지양해야 할 태도
 - 북한지도부와 체제를 비난/판단하는 언행
 - 탈북민이 '수혜자'임을 상기시키는 언행
 - 외국어 사용과 취조, 비교하는 듯한 질문과 태도

- 생각해 볼 과제
 -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진정성' 있는 만남과 태도
 - 탈북민 '안전', '의존' 에 대한 민감성
 - 탈북민(특수) 이전에 '사람(보편)'으로 보는 태도

(3) 발표 3: 탈북민 지역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 발표자: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구책임자)
- ▷ 주요 내용: 지역서비스 현황,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조사, 전문가 조사 결과 등

- 본 사업의 배경
 - 탈북민 현황 및 이슈
 - 총 33,752명(5년 이상 80.5%, 5년 미만 19.5%, 여성 72%)
 - 2006년~2011년 사이 최대 입국, 2012년 이후 입국자 감소 추세,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29명 입국
 -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n=3,000) 결과, 65% 수도권(서울 26%, 경기 31%, 인천 8%) 거주
 -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내 사망한 탈북민 154명 중 90명(58%)이 사인 미상
 - 코로나19 영향으로 탈북민의 지역사회 연결망 약화, 사회적 고립 심화

 - 탈북민 정착 지원 서비스 현황
 -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역 및 주택 배정=>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초기집중교육 실시, 정착도우미 연결, 취업지원, 지역적응지원

- 본 사업의 결과: 설문조사, FGI, 개별면접조사 결과
(본 보고서와의 내용 중복으로 생략)

○ 본 사업 결과에 따른 제언: 탈북민 지원 방향성 제언

● 단기 방안

- 코로나19로 경제적 취약성 커진 탈북민 사례 발굴
- 정착 5년 이내 탈북민 지원에서 정착 5년 이상 탈북민 지원으로 전환
- 가족 단위 지원
-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생활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 탈북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 중장기 방안

- 탈북민 지역 배정 시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여 자원 집중
- 탈북민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 높이기 위한 통일부 책임 강화
- 정보관리 일원화와 고도화
-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지자체 책무성 강화
- 지역적응센터의 독립 공간 지원
- 종사자 수당 및 인건비 지원

(4) 지정토론

- ▷ 토론자: 김정아(통일맘 연합회 회장), 최은정(민주평통 종로구 협의회 청년 위원장)
- ▷ 주요 내용: 탈북민과 일반인(남한사람)의 관계 형성, 탈북민 정책의 지방 지원 방향, 탈북민 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필요성

○ 탈북민과 일반인(남한사람)의 관계 형성

- 탈북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와의 신뢰관계, 안정적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 이러한 관계 형성은 내담자의 평소 사회적 관계망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남한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므로 탈북민과 일반인(남한사람)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교육, 공익광고 등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인식 제고가 필요함.

○ 탈북민 정책의 지방 지원 방향

- 현재 탈북민 정책은 지방을 지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탈북민을 전국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수도권에 배정하는 탈북민을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민 사이에서 정보력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 전국으로 배정하기에는 탈북민의 숫자가 너무 적음. 이러한 전국 배치가 과연 좋은 방향인가를 재검토할 시점임.
- 수도권의 경우, 주로 임대주택에 배정하게 되어 집합적인 탈북민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이 있음. 고민이 필요한 문제임.

○ 탈북민 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필요성

● 탈북민 단체 운영 및 활동 현황

- 탈북민 단체 중 탈북민 정착 지원 중심의 사업참여 단체는 극소수임.
- 열악한 단체운영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탈북민 단체는 수익성 사업중심으로 활동함.
- 남북문화 통합센터 탈북민 지원사업의 경우, 예술단체 중심으로 운영됨.

● 탈북민 단체와의 협력 필요성

- 탈북민 단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접촉과 소통이 용이함.
- 재단 상담센터는 스스로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탈북민들은 의지가 없음.

● 탈북민 단체 협력 및 지원 방향

- 지역적응센터와 탈북민 단체의 협력이 필요함.
- 남북하나재단 예산집행기간에 탈북민 단체에 대한 별도지원이 필요함.
- 탈북민 단체와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장에 맞는 운영방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다. 세부사업 3: 정책 개선 방안 도출

(1) 기존 전달체계 개선 방안

○ 지역적응센터의 안정적 운영 보장

- 지역적응센터는 탈북민에게 대민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전달체계이므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야 함.
- 국고보조금은 통일부에서 확보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 독립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를 개정하여 광역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적응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탈북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적응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
- 보수체계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전문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시간외 근무수당, 교통비 등 처우 개선에 필요한 수당제 도입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자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지역적응센터 운영의 유연성 확보

- 단기적으로는 25개 센터 개소 수를 유지하되, 입국 탈북민 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신규 입국자를 탈북민이 많은 지역에 배정 하여 접근성 높은 지역의 지역적응센터를 이용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10년 이내 전입자가 없는 지역은 지역적응센터의 성격을 전환하여 초기집중교육 등을 폐지하고 사례관리 사업만 남김.
- 기존 및 신규 전입 탈북민이 많은 지역은 지역적응센터의 예산과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여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생활안전망 구축 방안

○ 지역적응센터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필요

- 입국 후 기간을 고려하여 정착 초기(5년 이내), 중기(6~10년), 장기(11년 이상)를 구분하여 지역적응센터는 초기, 중기 탈북민 대상 서비스에 집중하고, 장기 탈북민은 지역적응센터 외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른 전달체계를 이용하도록 연계하는 것을 제안함.
- 탈북민이 많은 지역의 가족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탈북민 이해교육의 실시를 제안함.

○ 탈북민의 비공식 사회관계망 구축 필요

- 비공식 사회관계망은 생활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요소이나 탈북민들의 사회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안전, 조기정착 등의 목적으로 탈북민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는 탈북민들이 있음. 따라서 건강한 탈북민단체를 양성하여 사회관계망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초한 다양한 비공식 조직(마을공동체, 자조모임, 자원봉사 단체 등)에 탈북민이 참여하면서 사회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후 취약 탈북민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탈북민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커짐. 정착 기간에 관계없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 증가함.
- 특히 아동, 노인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탈북민 지원 방향

- 공식적, 비공식적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되, 가구·가족 단위로 일상생활 문제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생애주기별 단계(1인 가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함.

Ⅲ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1) 사업 평가

- 사업의 적절성: 탈북가족의 생활안전망 구축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과제 구성 및 진행을 전반적으로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함.
- 사업의 효율성: 탈북민 지원 전문가, 지역적응센터 실무자, 탈북여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계점과 생활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함.
- 사업의 발전 가능성: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인 미상의 탈북민 고독사가 90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고(조선일보, 2021.11.27.), 2021년에는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탈북민들의 부적응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탈북민의 공식적, 비공식적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을 발전시켜 지역적응센터의 기능 재구조화 및 컨설팅, 탈북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2)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전국의 25개 지역적응센터 실무자를 전수조사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남북 하나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 평가 기간과 맞물려서 조사 일정이 지연됨.
- 정기 평가에서 탈락한 센터가 다수 발생하여(이 기관들은 수탁 기관이 변경될 예정) 여러 차례 설문 참여 요청에도 참여도가 예상보다 낮았음.
-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응센터 운영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향후 지역적응센터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임.
- 탈북여성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하였으나 아동 대상의 서비스 요구도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추후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요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계획

- 본 연구에서는 탈북민 심층조사를 통해 전달체계 활용과 생활안전망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2022년 통일평화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본 사업의 결과로 도출한 탈북민 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일부 정착 지원과에 전달할 계획임.
- 탈북민 대상 생활안전망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할 계획임.

2. 건의사항

- 통일·평화연구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를 전체적으로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본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향후 사업 공모 시, 단년도 과제뿐 아니라 다년도 과제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도가 높은 보다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IV

관련 자료

1.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첨부1)
2. 지역적응센터 설문조사지 (첨부2)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1).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 (2021~2023).
- 권숙도 (2019).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통일연구, 2191), 71-108.
- 김학범, 김현수 (2019).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4), 246-270.
- 김혜원 (2020).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의 발전방향. 다문화가족연구, 12(1), 109-134.
- 나근호(2019). 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19(2), 119-147.
- 백남설 (2019).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09-130.
- 송은희, 설진배, 박병석 (2018).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독일 사례의 적용. 평화학연구, 19(3), 139-160.
- 이진석 (2020).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20(3), 117-156.
- 조민희, 유호 열(2019).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4(1), 105-126.
- 통일부 (2021). 「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본계획」 수립. 2021.05.18. 보도.
-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실무편람.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김명성, 김동현 (2021.11.27.). 정부 무관심 속에,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27/SER533YWCJDEBHPPJEHWIRN6P4/